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용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285
----------	------

발의연월일 : 2021. 4. 2.

발 의 자 : 조용천 · 오영환 · 이규민
유기홍 · 최인호 · 박성민
서삼석 · 최기상 · 이상현
김철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신용정보업자는 실명인증자료를 관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실명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거나,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는 위법한 표현행위가 감소할 것이라는 추상적 가능성에만 의존할 뿐 실제효과가 있는지 불분명합니다. 오히려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의사표현이 가장 긴요한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등 이용자로 하여금 실명확인을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익명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부정적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익명표현을 규제함으로써 대다수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광범위하게 제한한다고 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2021. 1.28. 선고, 2018헌가16).

이러한 위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법 상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안 제82조의6 및 제261조제3항제4호).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6을 삭제한다.

제261조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①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이라 한다)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실명인증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언론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한 것</p>	<p><삭 제></p>

으로 본다.

② 정당이나 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
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
대의 정보등을 게시할 수 있도
록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
정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개인신
용평가회사는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실명인
증자료를 실명인증을 받은 자
및 인터넷홈페이지별로 관리하
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 그 실명인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인터넷언론사는 제1항의 규
정에 따라 실명인증을 받은 자
가 정보등을 게시한 경우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
방 등에 “실명인증” 표시가 나
타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

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서 정보등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등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⑦ 인터넷언론사는 정당·후보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등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의2. (생략)

4. 제8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의2. (현행과 같음)

<삭제>

<p><u>자</u></p> <p>5. (생 략)</p> <p>④ · ⑤ (생 략)</p> <p>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2. (생 략)</p> <p>3. <u>제82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u> <u>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한</u> <u>자</u></p> <p>4. (생 략)</p> <p>⑦ ~ ⑫ (생 략)</p>	<p>5. (현행과 같음)</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4. (현행과 같음)</p> <p>⑦ ~ ⑫ (현행과 같음)</p>
---	---